

광주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박차

4년간 42개 사업 1,580억
맞춤형 일자리 740개 창출
문화기반·사회참여도 확대

광주시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4년간 1,580억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

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우선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 74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보장구 6개를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해선 문화·교육·체육 기반을 견고히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해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83곳을 운영한다. 또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비장애인인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법정 대수 충족에 주력하고, 무장애 정류장과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종중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광주모형을 전국화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 장애 유형별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시, 도시철도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15일부터 6개 공구 대상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15일부터 17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유덕동 차량기지과 본선(시정·광주역) 6개 공구 등 7곳이다.

안전점검에서는 지반침하, 굴착면 붕괴 등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 등 해빙기 안전대책을 점검한다.

또 교통안전·안내시설물 관리 상태, 건설 현장 주변 보·차도 및 정리 실태 등 봄맞이 환경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상·하수관로 관리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덕남정수장 사고와 관련해 상수도관 손괴 예방을 위한 테스트(TF)팀 운영중인 광주시는 도시철도 공사 중 상수도 누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내 상수관로 매달기, 관로 주변 현장 관리 등 상수관로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소관부서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도, 지역맞춤 어업환경 경쟁력 강화

784억 투입 21개 사업 추진

기반시설 조성·생산력 향상

전남도가 올해 지역 맞춤형 ‘어업환경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12일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유해생물 구제 등 21개 사업에 총 784억원을 들여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촌사회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잦은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어선 규모, 양식 형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분야별로 어업 기반시설에 190억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시설을 조성한다.

또 303억원을 투입해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보험을 지원해 예상치 못한 사

고에 따른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한 보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조업할 동 중 재해를 입으면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책임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7억원을 들여 불가사리, 썩, 해파리 등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추진해 수산 자원 번식과 보호, 생산력 향상도 도모한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근해·연안어선 감척, 어업 경비 절감, 안전사고 예방을 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이 이뤄지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27억원을 투입한다.

박영재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

지난 11일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건희 특검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이뤄지나

국토부·전남도 주민간담회

“시민 의견 충분히 반영”

순천 도심 통과로 지역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전선 사업의 노선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광주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지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순천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순천시장, 순천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경전선 철도건설 사업은 광주에서 나

주 혁신도시와 보성을 거쳐 순천을 잇는 121.5km 길이의 구불구불한 기존 철로 선형을 개량하고 전철화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9,848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순천 도심 우회를 요구하는 순천시민의 의견에 대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관계기관, 순천시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순천시민들은 광주송정-순천 간 비전철구간의 신속한 추진과 순천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 남해고속도로 인근 노선 성산역을 활용하는

우회노선 등을 건의했다.

경전선은 현재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 36분(광주 경유)이 소요된다. 2024년 남해선(목포-보성)이 개통되면 당분간 환승은 불가피하지만 3시간 37분으로 단축된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고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 2030년 완전 개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운행시간이 2시간 24분까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순천시와 함께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주민 편의가 향상되도록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이개호, 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 TF단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0일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2024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공천제도 TF는 22대 총선 1년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 TF는 단

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됐고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 배재정 부산사상구지역위원장등 원내외 11인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 원칙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



는 것”이라면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해 총선 승리 및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서동용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2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신체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제19조 제3항에 있던 ‘불리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추가되는 조항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



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등이다./서울=강병운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